

개방화시대의 협동조합과 지도자의 역할



김 영 철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함께 1980년대를 거치면서 매우 급속한 변화를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는 198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1989년 현재 1인당 국민총생산 5000불대에 다달았다고 하나 산업부문간, 또는 국민계층간 상대적인 소득격차의 심화는 앞으로 “21세기 선진조국”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도, 농간의 소득격차문제는 식량안보 논쟁을 차지하고서도 국민경제의 불균형 성장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안정이 저해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최근들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가중되고 있는 수입자유화의 압력은 소농경제하에서 국제경쟁력이 매우 약한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일종의 위기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하겠다. 1962년 제1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실시이후 지금까지 제6차 계획을 추진하여 오는 동안 우리나라 농업부문은 개방화, 또는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이 거의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한 선진제국들에 의해 농축산물 시장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느 나라 경제든간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중요성 때문에 경제정책 차원에서 농가소득의 지지, 주요 농업생산 자재의 보조, 수출지원, 생산기반이나 유통시설의 기반확충, 적정 농업금융정책 등 여러가지 형태로 농업부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에서 세계 농축산물 교역의 자유화 움직임이 점차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한 여러가지 장, 단기 대책을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부문이 어떠한 경제적 환경속에서도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제대로 성장, 발전이 되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농민자신들의 노력과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 하면 한마디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다. 즉 농업생산 기반이 대폭적으로 조성되어야 하고, 농축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농업

금융정책 및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농축산물의 질적 개선 등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대폭적으로 강조되어야 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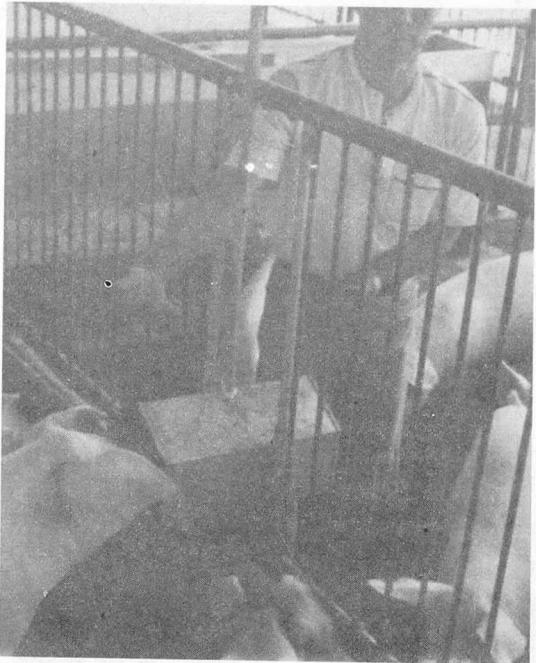
농민들도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식품소비가 종전의 양적 충족에서 질적충족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농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자조운동인 “협동조합” 운동도 협동조합의 제원칙과 지금까지의 실천경험으로 보아 개방화시대에 조합원 농민들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보호대변하는 중요한 개발전략 중의 하나이다.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열세에 놓여지게 되는 농어민, 일반소비자,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가들의 계층에서 자조·자주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들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 추구하자는 일종의 자구운동이다.

협동조합운동은 18세기 후반에 서구의 초기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 문제를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결해보자는 자주 자조적인 단체운동이다. 협동조합운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에 의해서 성공한 경제적 약자들의 민주적 단체운동이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 운동은 지금으로부터 150여년 전에 영국의 “롯치데일 선구자 소비협동조합”的 성공에서 비롯되어 지금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수축협 등 소위 하향식



조합을 보면, 협동조합의 운영자체가 조합원들에 의한 자율적인 사업운영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타율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나 이익에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었던 점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농어민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변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농수축협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못하고 하향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봉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조합원들은 자기조합 의식이 결핍되어 조합원들의 조합참여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농수축협이 그동안 양적으로는 매우 높은 성장을 하였다고는 하나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이나 자기조합 의식이 낮아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1988년 말에 개정된 농수축협법에 따라 지난 1990년 3월 말까지 단위조합이나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모두 조합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4월에는 농수축협의 중앙회장이 이들 직선된 조합장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아울러 각 협동조합의 운영면에서도 대폭적으로 자율성이 부여되어 정부로 부터의 규제 및 간섭 문제도 크게 완화되었으며, 협동조합의 사업 영역도 확대되었다. 이것은 농수축협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민주적인 자율성과 독자성이 크게 보장되었고 이에따라 협동조합이 앞으로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 협동조합도 농수축협과 신협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고, 1987년말 현재로 보더라도 조합수가 전국적으로 3,000여개에 총 조합원수는 무려 360여만명에 이르며 이들 협동조합에서 취급한 년간 취급고가 무려 40여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부문으로 성장하였다.

이와같이 방대한 협동조합부문이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제대로 운영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부문간, 계층간 소득격차문제를 시정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지금 밀어 닥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 방안도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자는 자주·자구(自主·自救) 운동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운동이란 그 원칙상 조합원에 대한 최대봉사를 목적으로 인적 결합체이자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들을 위해서 실지로 사업을 하는 민주적인 자조, 자주 단체이다.

또한 협동조합운동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의 실질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궁극적으로 부(富)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사회, 경제적인 운동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주의에서는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협동조합 부문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소비의 연계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협동조합의 원칙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농수축협과 신협이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으로 단결이 된다면 적어도 360여만 가구의 협동조합부문 내에서는 아무리 수입개방을 하더라도 이에대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협동조합경제의 이점은 자원 낭비의 방지나 선전광고비의 절약 또는 상품의 품질보장 및 안전거래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협동조합경제의 장점은 특정의 조합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 공급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조합원의 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통하여 공급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특별한 선전광고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최대봉사를 목표로 함으로서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상품의 품질은 항상 보장되는 안전거래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운동이 농수축협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농어촌 부문에서만의 자구, 자조운동에 그쳐서는 “협동조합 주의의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 인구 이동으로 인하여 거대한 도시부문이 나타남으로서 도시 부문에서도 농어촌부문에 못지 않은 협동조합운동이 필요하다.

도시부문에서도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에 따



라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을 조직, 성장하게 함으로써 자조 및 이익의 공동분배에 관한 협동조합의 이념이 사회적으로 도시민을 적어도 조합단위로 결합시키게 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거로 적정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 등으로 표현되는 경제의 민주화 또는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접근방법을 보편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협동조합 특별법주의를 지양하고 협동조합 모법주의를 도입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이 자조, 자주적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현재의 협동조합의 다양화, 전문화 추세와 함께 각 중앙회가 사업체로서 이념구현 기능이 결핍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중앙회를 회원으로 협동조합의 이념구현 단체로서 “전국 협동조합 연합회(가칭)”를 설립하여 경제 5단체의 일원으로 협동조합 부문의 권익보호나 대변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은 도시와 농촌

을 불문하고 지역단위에서 각종 생산자나 소비자 단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사회·문화·경제의 복합적인 구심체로서 발전기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협동조합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협동조합 운동사례에서 본다면 협동조합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운동에서 지도자의 역할이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의 협동조합운동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요소는 훌륭한 지도자로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에서 훌륭한 지도자란 협동조합운동 그 자체만을 최종 목표로 하지 않고 협동조합운동을 보다 나은 사회정의와 질서의 구현을 위한 실천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아울러 농수축협의 민주적 관리원칙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특히 협동조합의 지도자란 조합원과 함께 의무와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민주적 지도자라야 함은 물론이다. ■